
국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2020. 4.

금 융 교 육 협 의 회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그간의 노력 및 평가	2
III. 과제별 기본방향	
1. 교육콘텐츠의 효용성 및 신뢰성 제고	5
2. 콘텐츠 전달채널의 체계화·다양화	7
3. 양질의 교육인력 확보	8
4. 실용적 교육방식 도입·확산	9
5. 학교 정규교육에서의 금융교육 강화	10
6. 금융교육 추진체계 개편	11

I. 추진 배경

- 금융교육이란, 금융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관련 지식을 이해하여 건전한 행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통칭
 - 최근 가계의 부채의존 심화, 청년 대상 불법대출 피해 확산, 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손실 등으로 금융교육의 역할 부각
- 英·美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금융교육을 “사회안전망”으로 인식하고 2000년대 초부터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
 - 2000년 IT버블에 따른 대규모 투자자 피해(美), 경제불황에 따른 개인파산 증가(英) 등을 계기로 금융교육을 강화*
 - * 금융교육 전담 정부기구 설치, 범정부차원 「금융교육 국가전략」 수립 등
 - OECD는 '08년 금융교육 전담기구(INFE: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를 설치하고 선진사례를 각 국에 전파 중
- 우리도 '03년 카드사 부실사태, '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교육협의회* 중심으로('07~) 금융유관기관 등이 금융교육을 추진
 - * 의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며, 기재부 등 관계 부처, 금융유관기관 등으로 구성
 - 청소년(1社1校*), 대학생(실용금융강좌), 고령층(금융사기·디지털 교육), 저소득층(신용관리교육) 등 교육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
 - * 금융사 지점이 인근 학교와 금융교육 자매결연(초·중·고교의 66%, 7,683개교, '19년)
-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간의 교육이 개인이 금융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엔 부족했다는 평가
 - '18년 OECD 금융이해력조사 결과* 국내 성인 상당수는 OECD의 최소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 * 측정분야 / OECD 최소목표(100점 만점) / 설문대상 중 OECD 최소목표 달성비중 : ①태도 / 60점 / 43%, ②행동 / 66.7점 / 47.2%, ③지식 / 71.4점 / 58.3%

➡ 국내 금융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19.9~11월)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마련

II. 그간의 노력 및 평가

1 그간의 노력

① (평생교육) 금융유관기관, 금융업권, 공익재단·비영리단체 등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관련 인프라를 제공 중

○ 금융위·금감원은 국가 금융교육 추진체계로서 민관협의체인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금융교육 기획·총괄 기능을 수행

○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02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청소년 교육은 **全 금융업권의 1社1校 캠페인 참여**(’15년~)로 저변이 대폭 확대*

* 1社1校는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의 청소년 교육실적 중 약 31%를 차지(’19년)

○ **청년층**의 경우, **대학교 실용금융강좌***(’16년~, 금감원), **군장병·학자금 대출자 교육**(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등을 실시

* 1학기 동안 금융시장 및 제도 등 금융지식 전반을 강의(’19년, 97개 대학 참여)

○ **고령층***, **소수집단**(보육원, 새터민, 재소자, 다문화가정 등) 대상의 교육이나 관련 콘텐츠는 **금융유관기관에서 꾸준히 제공**

* 최근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18년~), 전국퇴직금융인협회(’17년~) 등도 참여

○ 금융교육 인프라로서 **학교교사 연수**(’07년~), **강사 양성**(’15년~) 실시(금감원,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투자자교육협의회 등)

② (학교교육) 정규교육과정에서 금융이 독립된 교과목은 아니며 주로 “사회”(中·高), “실과”(初)의 한 단원으로 금융을 교육

○ **초등**은 합리적 소비(용돈관리 등), **중·고등**은 생애재무설계(금융상품 유형별 특징, 자산관리 원칙 등)에 대한 이해에 중점

- 교육과정 개편 시마다 금융 관련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 최근 자유학년제 등 교사 자율수업 기회가 확대되어 민간 금융교육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

2 금융교육에 대한 현장의 평가

※ '19.9~11월, 한국갤럽의 실태조사(설문대상: 일반국민 1천명 · 교육수강생 8백명 · 강사 2백명, 학교교사 1백명)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

◇ 민간 중심으로 우리 금융교육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져왔으나, 국가 차원에서 교육의 체계성 ·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

"지금 금융교육을 하는 기관들은 실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몇 명이 참여했냐, 예산 얼마나 썼냐 숫자만 쌓아가면 되요 그 실적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 실태조사 인터뷰 중

1 민간기관에서 수많은 교육콘텐츠를 개발 · 배포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

○ 조사결과, 교육콘텐츠에 따라 만족도에 상당한 차이 발생

- ▶ 응답자의 49.6%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
- ▶ 그러나, 적지 않은 응답자(29.2%)가 자신이 받은 교육내용이 인터넷에 무료로 게시되어도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변
- * 이유: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음, 상업성 우려

○ 다수 전문가들은 국민들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교육콘텐츠의 질적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교육콘텐츠의 효용성 및 신뢰성 제고 추진 [Ⅲ-1]

2 국민의 금융교육 수요는 크지만, 체감도는 낮은 상태

○ 응답자의 68.6%는 자신의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

○ 응답자의 85.3%는 국내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며, 필요한 금융지식은 주로 인터넷·서적(47.8%)이나 금융거래 과정에서 직원과의 상담(24.7%)으로 해결

- 금융교육이나 공적 상담을 이용하는 비중은 6.5%에 불과

⇒ 교육콘텐츠 전달채널의 체계화 · 다양화 도모 [Ⅲ-2]

③ 금융교육 강사·교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

- 많은 기관에서 강사 인증·양성 프로그램, 학교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관련 일관된 기준이 부재
- 조사에 응한 강사의 상당수(77.6%)는 금융교육 외 직업을 병행 (현직 금융권 종사자의 비중: 65.4%) → 교육효과가 제한적일 우려*

* 커뮤니케이션 등 강의역량 부족, 마케팅 기회로 활용 등

⇒ 양질의 교육인력 확보 노력 강화 (Ⅲ-3)

④ 기존의 금융지식 전달을 위한 강의나 텍스트 위주의 교재는 교육대상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

- 금융교육 선도국가인 英·美에서도 교육프로그램 예산편성 시 교육에 따른 태도·행동 변화 가능성 등 실효성을 중점 검토

⇒ 실용적 교육방식 도입·확산 추진 (Ⅲ-4)

⑤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금융의 비중이 상당히 낮으며,

- 중·고교의 경우 생애 자산관리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상황

“교과서 맨 마지막 단원에 금융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원은 대개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는데 이 경우 선생님 의지에 따라 수업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 某고교 교사

⇒ 학교 정규교육과정상 금융교육의 효과성 제고 추진 (Ⅲ-5)

⑥ 금융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과거부터 교육기관들 간의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여전히 미흡

- 교육기관들 간의 역할분담이나 정보공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의 중복사각지대 발생, 관련 인력·예산의 비효율성 증대

“금융교육기관이 많아졌고 예전에 비해서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 4개 기관에 교육을 해달라고 하면 4개 기관 모두 다른 기관이 이 학교에서 뭘 교육 했는지 모르니까 다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갈 수 밖에 없어요” - 某 강사

⇒ 교육 거버넌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 (Ⅲ-6)

Ⅲ. 과제별 기본방향

- ◇ 개인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역량은 가질 수 있도록 2020년을 원년(元年)으로 하여 금융교육의 “**질적성장**”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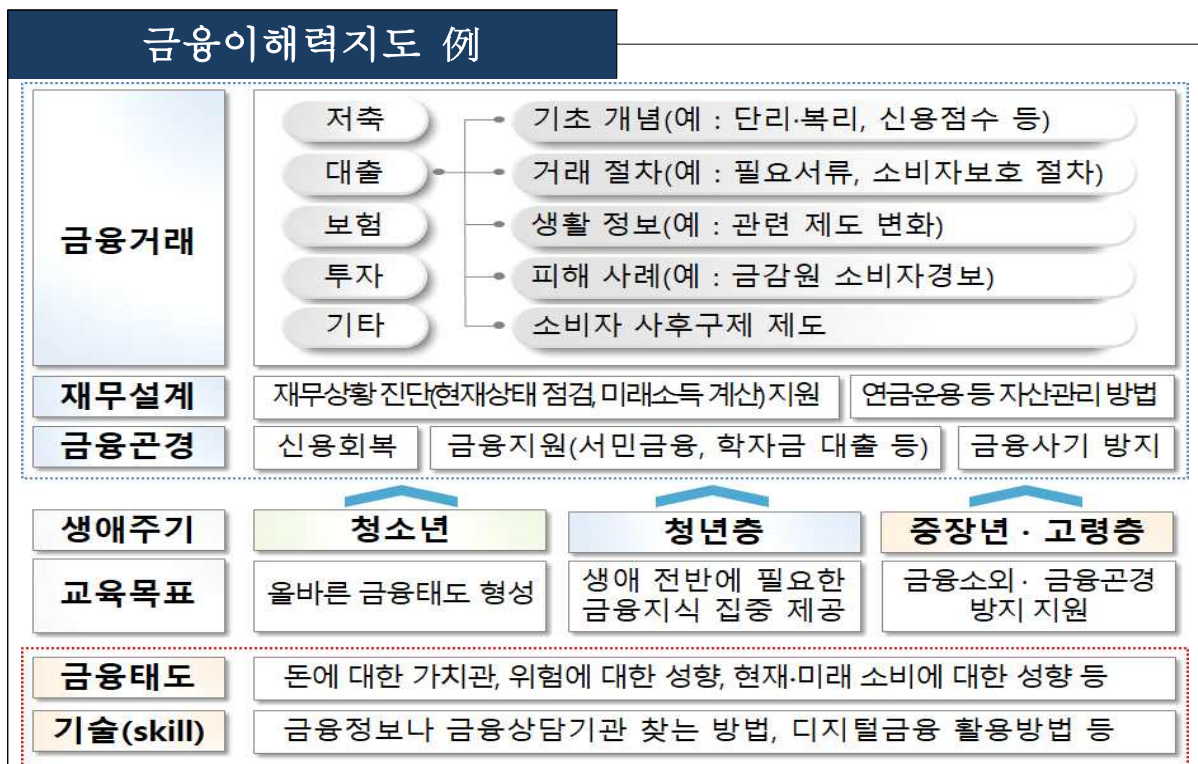
1 교육콘텐츠의 효용성 및 신뢰성 제고 추진

1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개발을 위해 “**금융이해력지도**”를 설계

→ 금융이해력지도를 ‘틀’(frame)로 하여 기존 콘텐츠(텍스트, 영상, 만화, 게임 등)를 분류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규 콘텐츠 개발 추진

- ① 모든 국민이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돈에 대한 가치관, 위험성향 등), 기술(금융정보 찾는 방법 등)을 정립
- ② 생애주기단계별(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교육목표에 따라 금융 상황(금융거래, 재무설계, 금융곤경)별로 필요한 금융지식을 선별

※ 신규 콘텐츠 개발 시 생애주기단계별 특성(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및 소수집단(장애인, 새터민 등)을 고려



2 콘텐츠가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fashionable), 적시성(timeliness)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을 마련

* 연말 금융교육협의회에서 차년도 방향 의결 → 차년도末 콘텐츠 개발결과 공유·피드백

- 또한 개별 기관들이 콘텐츠 개발 시 **교육수요자의 평가**를 받도록 관련 절차(best practice)를 정립·확산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 例

-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 금융소비자 역량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간 중점교육사항***을 선정 → 콘텐츠에 반영
 - * (예) 저위험·고수익 금융상품의 허구성, 청소년 불법대출 피해사례 전파, 고령층 디지털금융 교육,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 권리 등
- 불법사금융 단속, 소비자정보 발령 등 금융감독 결과 나타난 **금융소비자 피해사례**는 신속하게 전파*
 - * 팸플릿이나 카드뉴스 등 배포가 용이하고, 짧은 시간 내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
- 청소년의 경우, **또래의 금융고민** 등 올바른 금융생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소재를 적극 활용
 - * (예) 금융의 위험성을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체감시킬 수 있는 다큐멘터리 제작

콘텐츠의 유용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 인증제**를 도입
→ 인증 콘텐츠에는 브랜드(예: **finance sense**, 추후 공모) 표시

* 영국은 금융감독기구, 금융협회,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금융교육집행기구(PFEG: 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을 설치하여 우수 교재를 인증

-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이 콘텐츠를 정비하거나 신규 개발 시 준수해야할 원칙을 「**콘텐츠 인증기준***」으로 정립

* (예) 국가 금융교육방향에 부합, 교육대상에 적합, 마케팅 우려 방지 등

* 영국 금융교육 평가기준(Evidence&Evaluation) 등 선진사례 참고

-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이 아닌 경우(언론사, 유튜브 등)에도 적극적인 확산이 필요한 경우 인증

⇒ 「**콘텐츠 인증기준**」 마련 후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이 기준에 공개·배포한 콘텐츠를 전수정비

2 교육콘텐츠 전달채널의 체계화·다양화

1 직장(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지방 금융교육의 기초 인프라로서 전국 각지에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 금융권(농·수·신협, 우체국 등 포함), 지방상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공간 풀(pool)을 구성 → 연간 금융교육계획* 수립 시 활용

* 금융교육협의회가 연령, 지역,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계획 수립

교육콘텐츠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몰(mall)”을 구축

- 인증된 콘텐츠*를 금융이해력지도에 맞춰 제공

* 금융교육협회 참여기관 외 유튜브, 팟캐스트 등 콘텐츠도 포함

- 엄선된 우수 콘텐츠(매년 시상식 개최)는 선별하여 별도 게시

- 국민들이 자주 방문하도록 교육콘텐츠 외에도 금융고민 해소에 유용한 서비스(예: 금융·법률 상담 커뮤니티, 연금계산 등)를 제공

금융교육이 국민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수요자별로 친숙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수시로 전달

대중매체 활용 예

- 금융 분야에서 인지도·신뢰도가 높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공인(公認) “*Finance Communicator*”로 위촉

*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정책을 그 배경이 되는 지식과 함께 전달

- 청소년·청년이 대출 등 금융 선택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할 수 있는 게임 등*을 TV 프로그램으로 제작

* (예) 유명 캐릭터, 자녀교육 프로그램 등과의 협업

- 자영업자·고령층의 경우 선호도 높은 라디오 프로그램 적극 활용

3 양질의 **교육인력** 확보 노력 강화

1 금융교육 강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교육기관*마다 달리 운영하고 있는 **금융교육 강사 자격**(전문성, 소통능력 등)의 **일관성·신뢰 확보**를 위해 관련 기준 마련

* '19.7월, 미국 재무부는 금융교육의 균질적 전달, 금융교육 수요자의 강사 선별 지원 등을 위해 연방 금융교육위원회에 “전문강사기준” 개발을 권고

- 교육대상¹⁾, 교육내용²⁾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세분화

- 1) (예) 청소년 강사의 경우 전문성은 최소한으로 하되 높은 소통능력을 요구
- 2) (예) 금융사기 등 금융곤경 극복과 관련하여 법적 전문성 요구

- 개별 교육기관에서 관리*되는 강사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 강사(성명, 경력 등) DB**를 구축

* 통상 교육기관들은 전임강사를 두기보다 교육수요가 있는 경우 아웃소싱 형태로 운영

< 주요 교육기관의 외부강사 운영 현황 ('19년 기준, 단위: 명, 시간) >

구 분	청소년금융교육협	신용회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인원 수	51	38	30
인당 연간 강의시간	85	63	99
연간 양성 인원 수	44	70	-

학교교사의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개별 연수기관(금감원, 청소년금융교육협 등)의 **프로그램을 표준화**

* '18년의 경우, 교사 금융교육 연수 신청자 중 62.7%(1,275명)에 연수 제공 (금감원 970명, 투자자교육협의회 240명,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65명)

- 금융교육 연수에 대한 **학교장의 관심을 높여 수요를 확대**

- ‘교사 개인’이 연수를 신청하던 시스템에서 ‘**학교 단위** 연수를 활성화(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

- 연수 프로그램이 교사 개인의 금융역량과 금융교육역량을 **균형있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시

* 투자자교육협의회의 경우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투자자 교육에 치우친 측면

** 체험 중심의 ‘싱가포르 교사 금융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참고

4 실용적 교육방식 도입·확산 추진

- 1 청소년 금융교육은 기존의 일방적 강의를 통한 지식전달을 넘어 자기주도형·체험형 교육을 활성화

자기주도형·체험형 교육 예

-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경쟁하는 대회(토론회, 공모전 등) 확산*
* (예) 금융기관이 멘토로 참여하는 지역대항 형태 도입,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방송, 해외 금융기관 견학 기회 제공 등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는 장치 마련
-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금융 사용, 금융사기 방지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가상현실 속 역할게임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험할 수 있는 “the lost city*”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서울 외 지역에도 확산
*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은행연합회가 공동 개발('16년)

서민금융·학자금 대출 이용자, 개인회생 신청자 등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대상*의 경우 소모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은 정책자금(햇살론 등)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이러닝 프로그램을 제공

-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사람들 간의 소통을 통해 스스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 필요한 정보나 상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공

고령층의 상당수는 교육내용의 인지·학습이 어려운 점을 감안, 전화상담 등 교육 후 관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 고령층 교육기관(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등)에 ‘상담서비스 채널’ 설치 등

생계 등으로 교육참여가 어려운 직장인은 금융상담 과정에서 교육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금융상담과 교육 간 연계 강화

* (예) ①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상담기관 대상 금융 교육 콘텐츠 홍보·교육, ②상담인력 자격요건·내부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등

5 학교 정규교육에서의 금융교육 강화

1 금융교육기관 공동으로 **자유학년제**에 적용가능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예: 매주 1회 2시간 실시)을 개발·제공

○ **수학***, **국어(문학 등)**, **역사** 등 사회 외 교과목에서 올바른 금융 태도나 개념 등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

* 주식 투자수익률, 예금 단리·복리에 따른 이자 계산 등

○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학교장 참여단체, 교사 금융교육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적극 홍보

중학교(자유학년제), **고교**(수능 이후) 시기에 **최소 2시간 이상** 민간기관 제공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 역할분담 및 교육청 등 교육관계기관과의 공조 등

중점 제공 교육콘텐츠 예

▪ (중학교) “금융생활원칙 10選*”을 체험형 교육으로 전달

* (예) 저위험·고수익 금융상품의 허구성, 신용관리의 중요성 등

▪ (고교) 금융 고민이 있을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상담 채널, 학자금 대출 시 고려사항 등 사회진출 대비 교육 제공

초·중·고 금융교육 내용이 상호 연계되어 체계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 **차기 교육과정 금융교육 개선안(案)** 마련 추진(학교교사 참여)

초·중·고 교육과정 개선 예

	현행	개편 예
초	용돈관리 위주의 합리적 소비	금융태도 및 금융 관련 기초개념
중	금융상품 이해 위주의 생애자산관리	부채 및 신용관리
고	※ 중학교와 유사	생애자산관리 및 금융곤경 극복방법(서민금융, 채무조정 등)

6 금융교육 추진체계 개편

1 법정기구*인 금융교육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금융교육 전반을 총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3.24일 공포)은 금융교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

- 연 2회(3월, 11월) 개최 원칙 하에 연간 국가금융교육계획 수립,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들 간 협업유도·현안조정 등 수행

*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금융위규정인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제도화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교육협의회 워킹그룹(실무진 협의체)”을 구성·운영

- 기관들 간 수시 소통을 통해 ‘여러 기관의 전문성’이나 ‘대규모 예산·인력’이 필요한 경우 공동 교육 실시 등

교육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기관들 간 역할 분담 추진

기관들 간 역할 분담 예

- “1사1교” 참여 금융회사 중 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 전문교육기관 외주방식*으로 전환 추진
-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적기관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

* 1사1교에 참여한 카드사, 손해보험사 등은 전문교육기관 외주방식으로 교육 제공

금융교육 정책집행(콘텐츠 인증제 운영, 온라인 콘텐츠몰 구축·관리 등) 전담기구로서 “(가칭)금융교육센터” 설치 검토

지역 금융교육(금융상담 포함)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

- 현재 금감원 지방분원(11개, 서울·경기 제외) 중심으로 운영중인 지역금융교육협의회¹⁾ 참여기관을 대폭 확대²⁾

1) 기능: 지역 금융교육 수요 파악 및 계획(안) 수립, 금융교육기관들 간 협력 유도 등

2) (현행) 지역마다 구성이 상이(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교육청, 대학교 등)

→ (개선) 구성의 일관성 확보 및 확대(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추가 등)